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하천변 쓰레기수거)(한강)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직접일자리/소득보조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환경부/수생태관리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 목적) 상수원 상류지역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적시에 처리하여 쓰레기의 하천유입 및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 (사업 내용) 상수원 상류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 예산 및 재원: 한강 수계관리기금

〈표 1〉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예산 및 재원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집행률)			(%)
<input type="checkbox"/>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2,417	1,131	3,548 (100)	2,308	△10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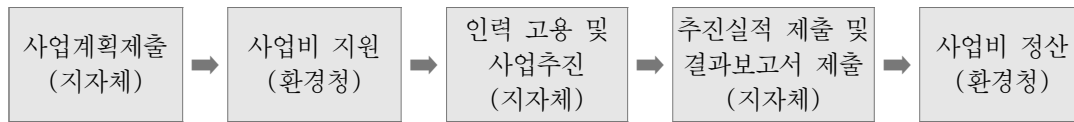
☐ 추진근거

- 한강수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주요 지원대상

- 한강 수계 지역주민

□ 사업운영 개요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사업비 감액(△109백만원)에 따른 고용 계획인원 감소(440명→403명)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전체) 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사업 참여자는 1,938명으로 직접일자리 전체 및 소득보조형 전체 참여자의 0.2%에 해당하여 참여자 규모가 작은 편
- (성별) 성별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 52.9%, 남성 참여자 비율 47.1%
-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장년층(55~64세) 참여자 비율이 4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층(65세 이상)이 36.1%, 중년층(35~54세)이 18.5%, 청년층(15~34세)이 0.9%의 순으로 나타나 장년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많은 편

〈표 2〉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참여자(개인)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소득보조형 전체	870,163 (100.0)	287,255 (33.0)	582,908 (67.0)	13,696 (1.6)	30,007 (3.4)	72,780 (8.4)	753,680 (86.6)
상수원관리지 역관리	2,021 (100.0)	963 (47.6)	1,058 (52.4)	18 (0.9)	362 (17.9)	881 (43.6)	760 (37.6)
하천변쓰레 기수거(한강)	1,938 (100.0)	913 (47.1)	1,025 (52.9)	17 (0.9)	359 (18.5)	863 (44.5)	699 (36.1)

주: 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각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을 수 있음

2)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2416건의 참여자 자료 중 개인정보 오류가 있는 478건을 제외하고 산출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성과지표

(단위: %)

	반복 참여율	취약 계층 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 소요 기간
				6개월 (180일)	
직접일자리 전체	3.1	57.3	37.7	37.8	91.5
소득보조형 전체	1.7	73.4	31.2	30.7	89.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0.2	27.2	15.9	18.8	125.9
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0.2	27.1 (90.3)	15.9	18.8	125.9

주: 1) 취약계층 참여율의 () 안의 수치는 2020년 재정일자리사업 합동지침상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 대비 달성 비율임

2)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2416건의 참여자 자료 중 개인정보 오류가 있는 478건을 제외하고 산출

3) 본 사업을 포함한 소득보조형 사업은 반복참여율과 취약계층참여율만을 성과지표로 적용하나 타 직접일자리사업과의 비교를 위해 다른 성과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함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4〉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직접일자리 전체	3.92	3.92	3.79	4.06	3.66	3.38	3.81	4.05	4.09	3.88
소득보조형 전체	3.98	3.98	3.86	4.08	3.70	3.49	3.89	4.13	4.13	3.96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4.06	4.13	4.03	4.22	3.93	3.71	3.95	4.32	4.10	3.99
하천변쓰 레기수거 (한강)	4.06	4.13	4.03	4.22	3.93	3.71	3.95	4.32	4.10	3.99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사업 내용 관련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주관적 만족도: 사업 참여 후 사업에 대해 가지게 된 긍정 인식 정도 / 상대적 만족도: 사업 참여 전 기대대비 만족도

〈표 5〉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참여자 민간일자리 희망 및 이행여부 조사결과

(단위: 명, %)

	전체	민간일자리 희망	민간일자리 이행
직접일자리 전체	4,609	47.3	40.3
소득보조형 전체	1,965	42.7	28.3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00	46.0	37.0
하천변쓰레기수거(한강)	100	46.0	37.0

주: 만족도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일 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실제 민간일자리 이행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주요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지역민들에게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장함.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만 수계관리기금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됨.
 -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볼 때 반드시 까지는 아니어도 참여자 대부분은 70대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하천변 쓰레기 수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도 필요함
- (일자리사업 성과) 노동시장과 고용에 기여 여부와 이유를 볼 때 노동시장에 아주 큰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반복 참여, 고소득자 제한 등으로 직접일자리 정책방향에 부합함

- 실적(쓰레기 수거량), 예산집행률 목표 달성함. 전년대비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었고 사업기간이 줄어들어 목표량이 삭감되었음

	2019년	2020년
목표	97t	52t
실적	97.6t	74t

- (운영 적절성) 현장 모니터링, 전년도 사업 지적사항의 반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으며, 예산의 경우도 계획대비 실 집행율이 낮다고 판단됨

- '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예산 실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실집행률 95.8%→88.1%)
- 채용인원도 '19년 대비 '20년 채용인원이 398명에서 379명으로 일부 감소
- 배정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편임. 인건비가 최저시급 기준이라 소득보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시급이 자체가 적기보다 단기 일자리기 때문에 소득보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사업기간은 5월~11월이지만 장마철 단기간에 집중 투입되는 경우가 있음
- 작년대비 반복참여 비율은 80% 이상임. 중복참여는 안됨. 하지만 반복참여가 가능한 65세이상 항목에 따라 실제로 참여자 전원이 다 반복참여가 가능한 상황임

- (제도개선 노력)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자체 전산망이 없고, 일모아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사업 관리에 한계. 유역청에게 추진계획 공지 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안내가 없었다고 함
- 중앙부처가 아닌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파악이 구체적으로 되지않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